



DMZ 국가촌락 사업(State Village Campaign) 연구

- 철원군 '통일촌' 사례를 중심으로 -*

State Village Campaign in DMZ - A Case Study of 'Tongil-chon', Cheorwon -

전상인** · 이종겸***
Jun, Sang-In · Lee, Jong-Kyum

Abstract

State village campaign appear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as a result of so-called 'High Modernism'. The campaign took place in DMZ in South Korea as well in 1973, and its most representative case is 'Tongil-chon' in Cheorwon. This village campaign was also closely related with the division of Korea. It was constructed with strict resident selection process and extraordinary economic incentive provision for the political propaganda vis-a-vis North Korea and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land use in DMZ. However, Tongil-chon decayed as time goes by because of its failures in community building and land ownership disputes. The social conflicts in Tongil-chon particularly imply the importance of land ownership distribution for inter-Korean unification process in the future.

키 워 드 ■ DMZ, 국가촌락, 통일촌, 마을만들기, 토지소유권 분쟁, 통일

Keywords ■ DMZ, State Village, 'Tongil-chon', Village Making, Land Ownership Dispute, Unificatio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대상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와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은 6.25 한국전쟁이 남긴 역사적 유산이다.¹⁾ 이곳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직접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서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하지만 그 곳에도 마을이 있다. 민간인들이 상주하는 가운데 외부 사람들이 제한적이거나 출입하기도 한다. 민간인 통제선 북쪽에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통상 '민북(民北)마을'이라 부른다.

최초의 민북마을은 한국전쟁 직후 허술한 출입제한을 틈 타 지역 주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하지만 휴전체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가 '마을 만들기'를 의도적으로 진행한 곳도 있다. 전자의 사례가 '자립안정촌'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채건촌'과 '통일촌'이 대표적이다. 채건촌과 통일촌은 전형적인 국가촌락 사업(state village campaign)의 결과다. 민간인통제구역 내에 건설된 국가촌락은 국제법적으로는 전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전이 국지적으로만 가끔 발생하는 안보상 여건변화를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농토를 경작하려는 욕구를 가졌고,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더불어 지역 민간방위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지녔다. 여기에

* 본 논문은 2015년 11월 4일에 개최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심포지움 "철원을 통하여 통일을 생각하다" 발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Seoul National University

***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jonggyom@gmail.com)

북한과 직접 대치하는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목적도 가미되었다.

DMZ 국가촌락 사업은 무인촌(無人村)에 사회공동체가 새로 형성되는 실험적 과정을 보여준다(전상인, 1997:149). 특히 강원도 철원군 유곡리 소재 통일촌은 한편으로는 대북선전과 체제홍보라고 하는 분단 상황 하 한국적 특수성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시와 통제, 그리고 행정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국가촌락 캠페인의 세계적 보편성을 보여 준다(유곡리 통일촌 위치는 그림 1 참고).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이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가촌락 사업의 대표적 사례로서 유곡리 통일촌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하고 기술한다. 이는 철원군 통일촌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이자 학술적 연구이다.²⁾ 둘째, 세계 각국의 유사 사례들에 대한 예비고찰을 통해 국가촌락 사업의 성공과 실패와 관련된 공공계획학적 의미를 성찰한다. 셋째, 통일촌이 당면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현재 분단관리 및 향후 통일정책에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논한다.



그림 1. DMZ 민북마을 및 유곡리의 위치
Fig. 1. Villages in Civilian Control Zone and the Location of Yugok-Ri

Source: Green Korea Organization, 2008:42.

본 연구의 방법론은 테다 스카치폴(1990:460-462)이 말하는 단일사례에 대한 ‘분석적 역사사회학’(analytic historical sociology)이다. 비교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국가촌락 사업 사례들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통일촌 단일사례에 대한 분석적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의 제한된 일반화를 모색하려는 연구전략이다. 그런 만큼 이 연구는 DMZ 국가촌락 연구에 있어서 작은 출발 혹은 마중물에 해당한다.

연구방법은 현장조사(설문조사, 면접조사, 답사)와 문헌연구로 구성된다. 2015년 7월 24일, 8월 10~12일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등록상 인구 118명 중 설문 49명, 면접 17명을 직접 면담하였다. 이 수치는 마을의 실제 거주민(65명 내외) 대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³⁾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2와 같다. 고도 근대주의와 남북한의 분단 상황을 배경으로 태동한 DMZ 국가촌락의 경과와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보편적 차원에서 공공계획학적 의미와 한국적 차원에서 통일 및 분단 정책에 관한 함의를 성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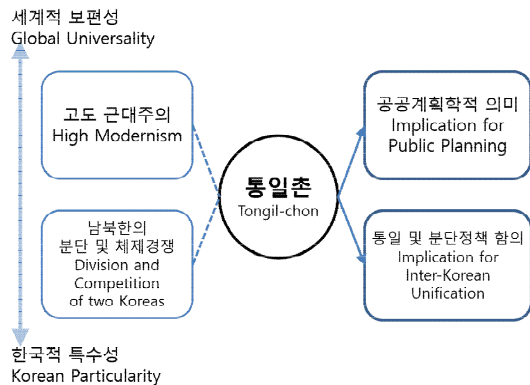


그림 2. 통일촌에 관한 분석틀
Fig. 2. Analytical Framework for Tongil-chon

II. 국가촌락 사업의 개념과 사례

1. 국가촌락 사업의 개념

촌락 혹은 마을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책이나 사업을 통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국가촌락 사업을 “국가가 입지를 결정하고, 거주민의 모집, 선별 혹은 동원뿐 아니라 공간구조나 주거양식, 일상생활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거 계획 및 실행”으로 정의한다. 전형적인 국가촌락 사업은 20세기 ‘고도 근대주의’(high modernism)의 산물이다(스콧, 2010:24-25). 하이 모더니즘은 이른바 ‘국가처럼 보기’(seeing like a state) 방식을 통해 인간과 자연을 사회공학적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신념체계를 말한다.

2. 국가촌락 사업의 주요 사례

세계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국가촌락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에티오피아에서 우선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거대한 국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한 에티오피아는 그것의 간판 사업으로 1985년부터 대대적인 국가촌락 건설에 나섰다(스콧, 2010:374-381). 그 목적은 다양한 언어권의 주민들과 분파성이 강한 지역들을 단일한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귀속시키는 것이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460만 명의 농민이 4,500개 국가촌락에 새로 정착했다.

국가촌락들의 공간은 일제히 직선 형태로 구조화되었고, 모든 주택은 양철지붕으로 덮인 정사각형의 님은폴로 건설된 다음 일련번호를 부여받았다(그림 3 참고). 직선형 공간구조와 획일적 주택형태는 반체제 활동과 폭동 방지, 주민 감시와 곡물 통제, 군

사적 동원의 편의성을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에티오피아의 국가촌락 사업은 그러나 흉작과 기아, 그리고 막대한 인명 손실을 초래하면서 궁극적으로 실패로 끝났다. 인위적으로 건설된 촌락에 강제 이주된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험적 지식과 작물 경작에 적합한 전통적 토착기술을 미처 알지 못했다. 또한 그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여 정착했기 때문에 유사시에 필요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박탈당한 상태였다. 말하자면 재정착 과정이 대규모와 초고속으로 진행된 만큼 장소적·사회적 맥락들은 크게 무시되었다.

탄자니아의 국가촌락 사업은 1960년대 초에 시작되어 약 20년 동안 꾸준히 추진되었다(스콧, 2010:337-371). 농촌 근대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농업의 국가공동 사업화를 통해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이 앞섰다. 탄자니아에서 국가촌락 사업은 “국민교육, 부지 검색, 위치 조사, 촌락계획과 토지분할, 관리자 훈련 및 재정착”의 단계로 진행되었다(스콧, 2010:354). 탄자니아의 경우 특히 미학적 질서가 강조되었다. 각각의 농촌마을에는 ‘보기 좋게’ 한 가지 종류의 환금 작물만 재배되었으며 농지와 주택, 도로 등 모든 공간이 규격화되고 표준화되었다. 또한 견본 촌락과 전시용 농장이 대량 건설되었다.

탄자니아의 국가촌락 사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거둔 부분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실패로 끝났다. 강제적인 촌락화와 집단 농업 도입의 실패, 관료제적 폐해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국가촌락 사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심해지고 1980년대 중반 최고지도자 니에레레(Nyerere)가 사퇴하면서 탄자니아의 국가촌락 사업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베트남전쟁 기간 동안 남베트남에는 이른바 전략촌이 등장했다. 이는 1961년부터 베트남 정부와 미국이 함께 추진한 것으로 국가촌락이 군사용으로



그림 3. 에티오피아 재정착 마을 전경
 Fig. 3. A State Village in Ethiopia
 Source: Scott, 2010:379.



그림 4. 이스라엘 키부츠의 전경
 Fig. 4. Kibbutz in Israel
 Source: Yann Arthus-Bertrand's Web site
<http://yannarthusbertrand2.org>

활용된 대표적 사례이다. 베트남의 전략촌은 농민들을 강제 소개(疏開)하여 공산계릴라와 주민을 분리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다. 그곳 주민들을 일련 번호가 매겨진 주택에 거주해야만 했고 출입이 엄격히 감시되었다(스콧, 2010:290). 베트남의 전략촌은 포로수용소와 유사했다. 전략촌의 열악한 주거여건과 가혹한 통제는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궁극적으로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곧 베트남의 작전 거점으로 역이용되었다.⁴⁾

이스라엘의 키부츠는 집단농장과 같은 촌락형태인데(그림 4 참고), 유대인 민족주의 운동, 곧 시오니즘에서 비롯되어 1909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키부츠는 토지의 공동소유와 모든 경제·사회조직의 집단적 관리를 지향하는 농촌 취락형태에서 출발했다. 주민들은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며 모든 수입은 키부츠에 귀속되었다. 의식주가 공동계획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18세 이하의 교육도 그곳에서 자치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아랍 국가들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키부츠는 민간 군사방위체계의 일환이었다.

키부츠는 70년 이상 성공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농업을 통한 주민들의 공간적 정착성 증대 및 이스라엘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적잖이 기여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키부츠는 급격한 쇠퇴를 경험하였다. 세계화로 인한 농업부문의 개방, 키부츠

의 경쟁력 약화,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등이 핵심 배경이었다. 그 결과 많은 키부츠에서 협동의 원칙이 무너졌고, 공유재산과 무료급식 및 공동육아 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III. DMZ 국가촌락 사업의 경과

DMZ 지역에 최초로 등장한 촌락은 판문점 인근의 대성동 마을이다. 휴전협상이 진행되던 판문점 주변에는 일찍부터 교전이 억제되는 가운데 마을이 형성되었다.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에 따라 DMZ 남측의 대성동, DMZ 북측의 기정동 마을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그 이후 외지에 나갔던 원주민들이 DMZ 지역에 귀향하여 농사를 다시 짓기 시작하면서 민북마을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휴전선 이남 수복지역에 대한 작전통제권과 행정관할권을 갖고 있던 UN군은 1954년 '귀농선'을 설정하고 그들의 영농활동을 암묵적으로 인정하였다. 남북대치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영농 허가지역은 점차 확대되었고, 이들 지역은 자립안정촌으로 공식화되었다(박영철·김영봉, 1997:66). 초기의 대성동 마을이나 자립안정촌은 전형적인 국가촌락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

1964년 민통선 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촌락 건설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 1968년부터 등장한 것이 '재건촌' 12개 마을이다. 재건촌은 출입영농에 따른 거주민 보호의 취약성, 촌락의 자연적 형성에 따른 경계의 불명확성 등 기존 자립안정촌의 단점을 보완했지만, 체계적 준비 및 계획의 부족에 따라 협소한 주거공간, 기반시설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박영철·김영봉, 1997:67).

재건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북선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3년에 건설된 것이 바로 통일촌이다. 197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남북한의 체제경쟁이 가열되었는데,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DMZ 국가촌락의 선전 역할이 부각되어 통일촌이 탄생하기에 이른 것이다. 통일촌은 철원군 유곡리와 파주군(현재 파주시) 백연리 두 곳에 만들어졌다.

DMZ 지역의 긴장이 점차 완화되고 민통선이 북상하면서 2013년 현재 자립안정촌과 재건촌은 절반 이상이 지정 해제된 상태다(표 1 참고). 한편 1998년 건설된 해마루촌이 실향민 재정착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바 있다. 재건촌 이후 DMZ 국가촌락의 대표 사례로서 명실상부하게 대북선전 임무를 수행

표 1. DMZ 지역 민북마을 현황
Table. 1. Villages in DMZ region

사례 Case	건설년도 Construction Period (Year)	건설된 촌락 수 Constructed Units	현재 촌락 수 (2013년) Current Units: 2013
대성동 마을 Daesung-dong Village	1953	1	1
자립안정촌 Self-reliance Village	1954-1986	107	45
국가촌락 State Village	재건촌 Jaegon-chon	1968-1973	5
	통일촌 Tongil-chon	1973	2
해마루촌 Haemaru-chon	1998	1	1

Source: Kim and Lee, 2013: 136-137.

한 것이 통일촌이라고 할 수 있다.

IV. 유곡리 통일촌의 태동과 성장, 쇠퇴

1. 태동

1973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은 “재건촌의 미비점을 보완”한 전략촌 건설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키브츠를 모델로 하여 통일촌이 건설되었다(경기문화재단, 2013:21-22; 강원도민일보, 2006.10.17.). 민간 방위체제의 구축, 유휴 경지의 효율적 이용, 대북선전의 강화 등을 목표로 내걸고 만들어진 유곡리 통일촌은 1973년 7월 30일에 입주식을 열었다.

유곡리 통일촌 입주식은 주요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무부 장관이 축사를 할 정도였다. 말하자면 최고 지도자의 관심 속에 태동한 국가적 사업이었다. 한 주민(P)은 입주식 장면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여기 입주식, 그 당시에 기가 막히게 크게 했어요. 학교에서. 그때 당시 내무부 장관이 김현옥씨야. 그리고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이렇게 와서 했거든. 그 내무부장관이 하는 얘기가 “당신네들은 여기서 살다가 눈두렁 발두렁 비고 죽으시오” 이랬단 말야.

유곡리 통일촌은 입주 주민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후한 편이었지만 주민선발 기준은 매우 엄격했다. 가구당 경작지는 논 3,300여 평, 밭 3,000여 평 정도였고, 약 15평의 양호한 근대식 주택이 제공되었다. 촌락 건설 사업비로 가구 당 약 460만원이 투입되었다(철원군, 1995). 정부는 통일촌에 당시 철원 읍내에서도 없던 전기시설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경운기 제공(2 가구당 1대), 부림소 공급, 전화 가설 등의 특전도 제공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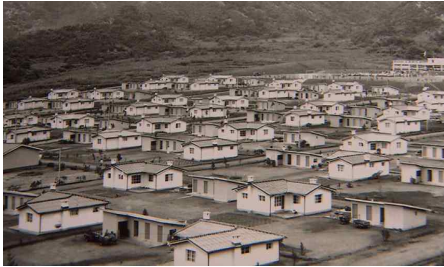


그림 5. 유곡리 전경(1973년)
Fig. 5. Yugok-Ri circa 1973

Source: Gimhwa-Up, 2009.



그림 7. 통일촌 주택 평면도

Fig. 7. Floor Plan of Tongil-chon Village

Source: 'DMZ GLocal Fair' Presentation of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8.14.



그림 6. 유곡리 위성사진(2015년 7월)
Fig. 6. The Satellite Picture of Yugok-Ri in July, 2015

Source: Google-earth, accessed 2015.07.02.



그림 8. 호수가 기입된 주택 현판

Fig. 8. Yugok-Ri Household's Numbered Signboard

Source: Taken in August, 2015.

입주 지원은 6: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주민 P의 증언). 군인과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입주민 심사위원회는 세대주의 연령은 45세 이하로, 가족 수는 5인 이하로 각각 제한하였으며, 특히 세대주가 장손일 경우 입주를 불허했다. 부부 모두 일정한 노동력을 갖추어야 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때로는 건강진단서가 요구되기도 했다.⁶⁾ 그 결과 총 60세대가 선발되었는데, 철원지역 출신과 기타 지역 출신 입주민의 비율을 반반으로 해 균형을 맞추었다.

하지만 주택,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해 입주식 후 1년여 동안 남성 세대주들만 먼저 통일촌에 들어와 합숙생활을 하며 농지를 개간하고 안보수칙 및 생활규율 교육을 받았다(주민 E의 증언).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이후 나머지 가족들도 한 달 동안 유사한 교육을 받고 마을에 들어와 결국

입주식 후 1년이 넘어서야 입주가 완료되었다. 최종적으로 총 59세대 231명이 최초의 통일촌 주민이 되었다(철원군지 중보편찬위원회, 1992:559).

통일촌은 내부구조와 외부형태가 동일한 주택들을 격자형 구조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시각적 통일성을 꾀하였다(그림 5, 6, 7 참고).⁷⁾ 유곡리 마을은 남고북저(南高北低)의 지형을 갖고 있어 대북한 선전용으로도 유리하였다. 당시 기준으로 통일촌의 주거시설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튼튼한 편이라, 초기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꽤 높았다고 한다.

주택의 벽면 두께는 총알이 관통할 수 없을 만큼 두꺼웠으며 초가지붕인 아닌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였다.⁸⁾ 북동쪽 최단에 위치한 주택에서 시작하여(1호) 남서쪽 최단의 주택까지(60호) 일련번호를 부여하여(그림 8 참고) 유사시 각 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휘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림 9. 통일촌 무기고 건물

Fig. 9. Weapon Store in Tongil-chon

Source: Taken in August, 2015.

유곡리 통일촌에서 주민들은 병영 내 군인 같은 생활을 했다. 무엇보다 유곡리 마을은 자체 예비군 중대로 조직되었다. 마을 무기고(그림 9 참고)에는 각 세대별로 총기가 비치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매일 저녁 인근 부대로부터 점호를 받았으며, 야간 등화관제가 실시되었다.⁹⁾ 또한 예비군훈련 시 각 세대별로 배정된 비상진지에 투입되어 방어훈련 임무를 수행했다.

유곡리 통일촌의 일상생활은 많은 불안요소를 안고 있었다. 입주 초기 주민들은 야외 활동 시 적색의 조끼와 모자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만 했다. 통일촌 주민이라는 식별력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남과 공비의 잠입 우려 때문에 옥수수 같은 키 큰 작물의 재배도 금지되었고 각 주택의 마당에 잔디를 깔았다. 또한 도처에 지뢰폭발의 위험성이 깔려있기도 했다. 주민들의 외지 병원 나들이나 자녀들의 학교 통학에서도 검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고, 외지에 사는 입주민의 가족들조차 마을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었다(주민 A, O의 증언).

이와 같은 애로와 난관에도 불구하고 입주 주민들은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열심히 개척하였다. 이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정부가 파격적으로 제공한 넓은 농지와 양호한 주택 등이었다. 주민들은 정부 및 군 당국의 지원하에 지뢰가 남아 있는 황무지를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가꾸어 촌락



그림 10. 통일촌 기념비

Fig. 10. Tongil-chon Monument

Source: Taken in July, 2015.

의 기반을 마련했고, 이러한 자부심은 통일촌 기념비(그림 10 참고)에 새겨졌다.¹⁰⁾

2. 성장과 갈등

한동안 유곡리 통일촌은 성공적인 국가촌락으로 자리 잡는 것으로 보였다. 1979년 정부는 ‘민통선 북방 개발사업’을 시작하여 유곡리 등 9개 민북마을에 약 34억 원을 투입, 기반시설 및 주택 개량, 농지 정리 등을 지원하였다. 같은 해 2-4월 동안 철원군은 5개 마을에 약 3억원을 지원했는데, 유곡리 통일촌에는 약 2,500만원이 지원되었다. 여기에 주민 부담금 약 470만원이 합쳐져 주택 보수 및 개량(183건), 목욕탕과 농산물 공판장, 공동우물(4개소) 신축 등 총 201건의 마을 개선사업이 이루어졌다(김영규, 2013:410-415). 입주식 이후 4년 만에 주거 및 생활 기반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입주 초기에 조직화된 집단농업 방식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1974년 철원군은 민통선 내 개간 농지 30만평에서 콩 800가마를 수확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곡리는 입주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¹¹⁾ 농지 개간 및 영농과정에서 군부대의 대민지원도 활발했고, 군인들과 주민들의 화합도 좋은 편이었다. 1973

년 당시 유곡리 인구는 231명이었으나 1975년 302명, 1980년 342명으로 증가했다(표 2 참고).

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갈등의 원인으로 세대주의 직업군인 출신 여부가 중요했다. 입주 초기부터 이장과 같은 마을 리더십을 직업군인 출신 주민들이 주로 맡게 됨으로써 일반 사병 출신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강원도민일보, 2006.10.17.). 직업군인 출신 여부는 학력 차이에 따른 갈등으로 이어졌다. 대체로 직업군인 출신 부부가 사병출신 부부보다 학력이 높았는데, 사병출신 입주민을 도와 주려는 직업군인 출신 입주민의 선의가 ‘배운 척, 아는 척’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¹²⁾

여기에 출신 고향에 따른 지역 갈등이 은밀히 작동했다. 통일촌은 입주 당시부터 인구구성이 인근 철원지역의 주민 50%, 타 지역의 주민 50%로 구성되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온 주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문화적 이질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곡리 통일촌에는 두레나 회식, 원거리 단체여행 등 공동체 활동이 활발했다. 특히 학교 소풍은 곧 동네 소풍이기도 했다. 하지만 초기에 직면했던 공통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극복된 이후에는 마을의 공동체 정신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민통선 지역 마을에는 군사문화와 민간문화가 서로 뒤섞여 갈등의 잠재력이 높은 편이다(전상인, 1997:148-149). 하지만 유곡리 통일촌의 경우에는 여기에 몇 가지 특성이 더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유곡리 통일촌은 DMZ 지역이라고 하는 엄격한 지리적 고립상태에 놓여 있었다. 섬처럼 격리된 공간환경 속에서는 사소한 차이나 갈등조차 크게 부각되기 쉬운 법이다. 둘째, 입주자들 사이에는 처음부터 협력하는 마음과 경쟁하는 심리가 혼재되어 있었다. 거의 같은 조건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운명공동체로서 서로 협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고자 하는 개인적 성취 욕구를 자극하기도 한다.¹³⁾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

표 2. 유곡리 인구 추이
Table. 2. Population trends in Yugok-Ri

Year	1973 ¹⁾	1975 ²⁾	1980 ²⁾	1984 ²⁾	1989 ²⁾	1994 ²⁾	1999 ²⁾	
Household	59	63	66	60	59	57	61	
Population	231	302	342	297	231	197	183	
Year	2001 ³⁾	2004 ²⁾	2005 ³⁾	2006 ³⁾	2007 ³⁾	2008 ³⁾	2010 ²⁾	2013 ²⁾
Household	59	60	59	58	58	59	62	56
Population	174	170	154	149	139	141	135	118

Source: 1) Committee for Republishing the Chronicle of Cheorwon-Gun, 1992; 2) Cheorwon-Gun, 1976-2015; 3) Gimhwa-up, 2009.

표 3. 유곡리 연령대별 인구(2013년)
Table. 3. Population Statistics by ages in Yugok-Ri, 2013

Age	under 6	7~19	20~29	30~39	40~49	50~64	over 65	Total
Population	3	5	3	11	12	24	60	118
%	2.5	4.2	2.5	9.3	10.1	20.3	50.8	100.0

Source: Cheorwon-Gun, internal data.

해 우연히 모였을 뿐, 공동체로서의 역사적, 문화적 기반은 애초부터 약했던 것이다.

3. 쇠퇴

내부적 갈등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유곡리 통일촌은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 강력한 외부 충격에 접한다. 접경지역의 수복지역에 본래 토지 소유자의 등기를 허용하는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83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외지인의 원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조치로서, 유곡리에 새로 정착한 주민들에게는 일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적지 않은 주민들이 토지 소유권과 이용권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민들에게 토지구매에 필요한 재원을 일부 용자해주는 방안을 취했으나 자금 부족과 일부 원소유자들의 매매 거부로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했다.

국가촌락 입주주민들은 토지 원소유권자들과의 법적 분쟁에서도 대부분 패소했다. DMZ 지역의 토지 분쟁에 관한 대법원의 대표적인 판결은 강원도 양구군을 사례로 하여 나왔는데 “민통선지역의 유휴지를 경작자에게 분배한 것은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소유권 자체를 부인하는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김인영·김재한, 1999:408).¹⁴⁾

토지 소유권 분쟁은 통일촌의 가장 큰 현안으로 부상했다. 원 토지소유권자가 나타났을 때 가난한 주민들이 자신의 경작지를 구매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대신 주민들은 토지의 일부만 매입하기도 했고, 그것조차 불가능할 경우 임대 경작을 하거나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유곡리 현지 주민들의 토지 소유 비율은 현저히 낮아졌고, 2015년 7월 현재에 이르러 28.6%에 불과하게 되었

다(김화읍 내부자료). 토지분쟁은 1980년 이후 마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표 2 참고).

본 연구자들의 현지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토지분쟁의 발생 자체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로 불만을 표시하였다.¹⁵⁾ 입주 당시 주민들은 정부가 토지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농업이 생업인 만큼 농지 소유 여부는 사실상 사활이 걸린 문제다.¹⁶⁾ 토지 소유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신뢰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무너진 것이다.

토지분쟁은 주민들 사이의 내부 갈등과 경쟁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권을 기반으로 주민들 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¹⁷⁾ 경우에 따라 같은 주민 사이에 고용-피고용의 관계도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는 입주 초기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크게 훼손시켰다.¹⁸⁾

설상가상으로 유곡리 통일촌은 기반시설의 낙후 및 노후화의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늘어났다. 연구자들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주민들은 마을의 문제점으로 공공시설 및 서비스 부재를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¹⁹⁾ 굳이 그들의 생각을 물어볼 필요도 없이 1970년대에 지어진 유곡리 통일촌은 외견상 오늘날 우리나라 일반 농촌에 비교하여 너무나 낙후되어 있었다.

특히 교육 여건의 낙후가 젊은 층의 외부이주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²⁰⁾ 유일한 학교였던 유곡초등학교는 학생 숫자 부족으로 1994년에 폐교되었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후 유곡리 외부 중·고등학교에 통학하는 것에도 불편한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 외에도 의료시설이나 문화공간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²¹⁾

1985년 이후 인구가 꾸준히 유출된 결과, 현재 주민들의 대부분은 입주1세대 노인들이다. 젊은 세



그림 10. 1970년대 유곡초등학교

Fig. 10. Yugok Elementary School in the 1970s
Source: Gimhwa-Up, 2009.

대일수록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표 3에서 보듯이 현재 마을 주민들은 50세 이상의 주민이 84명(71.2%)에 달한다. 주민등록상 50세 미만 연령이 34명(28.8%)이지만 상당수가 거주지로 등록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자들의 연령대는 더욱 더 높다.

총 60호 주택 중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이 14호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을의 쇠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곡초등학교의 폐교된 모습이다. 1970년대만 해도 그곳은 경로잔치와 학예회, 운동회 등을 통한 단합과 번영의 상징이었다(그림 10, 11 참조).

IV. DMZ 국가촌락 사업의 교훈과 함의

철원 유곡리 통일촌은 파주 백연리에 있는 것과 더불어 DMZ에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가촌락 사업이다. 다른 나라의 국가촌락 사업에서처럼 통일촌 역시 초기에는 정부의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현재에는 존립이 위협받을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렇다면 통일촌의 쇠퇴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으며 그것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일까?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하는데 첫



그림 11. 폐교된 유곡초등학교 전경

Fig. 11. Former Yugok Elementary School
Source: taken in July, 2015.

째는 공공계획학의 측면에서 국가촌락화 사업을 성찰하는 것이고, 둘째는 분단 및 통일정책의 측면에서 DMZ 국가촌락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1. 공공계획학적 차원

통일촌의 경험은 첫째,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물리적 기반시설이나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지속가능한 사회자본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물론 아직 통일촌에 농촌공동체적 측면이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았다²²⁾. 그러나 세대가 바뀌고 생활수준에 있어서 가구별 격차가 발생하면서 입주 초기 특유의 단결력이나 협동심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외부적 자극과 지원에서 시작된 통일촌은 스스로를 재생산할 수 있는 자체 동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둘째, DMZ 지역에 입지하여 섬처럼 격리되어 존재하는 촌락 형태로부터 국가주도 마을만들기의 태생적 한계를 엿볼 수 있다. DMZ 바깥세상과의 오랜 단절과 내부통제는 내부공동체 유지에 오히려 역효과를 발휘하는 측면이 있다.²³⁾ 공간적 고립은 외부세계에 대한 전망을 부추길 수도 있고, 내부갈등을 실제 이상으로 증폭시킬 수도 있다.

셋째, 국가촌락화 사업에 있어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궁극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통일촌이 현재와 같은 쇠퇴에 직면하게 된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1980년대에 시작된 토지소유권 분쟁이었다. 초기에 정부는 통일촌을 ‘기회의 땅’으로 제공했지만, 1983년 토지소유권 관련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 스스로가 통일촌 존립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런 일이 DMZ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통일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질 북한지역 내 토지소유권 분쟁의 징후이자 전조라는 사실이다.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에서도 토지소유권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²⁴⁾

2. 분단관리 및 통일정책 차원

통일촌은 애초에 경쟁적인 남북관계 속에서 대북 선전과 방위체제의 임무가 중요했으나, 현재는 남북한의 관계 및 접경지역의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예전과는 다른 접근과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통일촌이 처한 위기국면을 고려할 때 대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선택지로 가능해 보인다.

첫째, 분단관리 차원에서 국가촌락을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마을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물리적 시설의 전반적인 쇠퇴에 대응하여 노년층을 위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빈집이나 공터를 재생하는 등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는 미온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응 같아 보이지만, 현지 주민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처방이다. 현재 주민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도 생활시설의 개선 및 공공서비스의 확대이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정부는 최대한 지원하되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는 입주 주민 스스로가 되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통일촌 마을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DMZ 국가촌락을 안보 관광단지로 육성하는 전략이다. 그렇지 않아도 유곡리 통일촌은 최근 새로운 관광사업의 대상지로 부상하고 있다. 폐교된 유곡초등학교 부지에 서울시가 건설하여 2016년 5월부터 운영 중인 ‘가족자연캠핑장’도 그러한 시도의 일환일 것이다. 이미 그 선행은 경기도 파주 판문점 지역의 ‘통일맞이 대성동 첫마을 프로젝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²⁵⁾ 관광단지가 되어 DMZ 지역에 민간인이 많아지게 되면 이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이 해외 관광객의 대거 유치를 통해 아랍권의 무장공격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다(김학준, 1999:30).

셋째, 차제에 국가촌락사업을 DMZ 전역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다. 가급적 그곳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정주하게 하는 것이다. 어차피 그곳은 한국전쟁 이전에 인구가 밀집하여 살았던 곳으로 통일과정에서 재정주화를 통한 원상복구가 고려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이는 신도시건설 차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DMZ 접경지역 국가촌락 혹은 신도시들은 유사시 탈북인구를 흡수·관리하는 공간적 거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대북 선전촌이라는 통일촌 본래의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기여하는 것일 수도 있다.

V. 결론

국가촌락 사업의 세계적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고도 근대주의를 토대로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촌락은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경향이 있다. 자발성과 내부동력의 결여, 공동체의 균열, 토착화에의 실패, 외부와의 격리 등이 대표적인 이유로 손꼽힌다. 이와 같은 국가촌락의 보편적 한계와 실패

는 우리나라 DMZ 국가총력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와 동시에 유곡리 통일촌의 경우에는 DMZ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토지소유권 분쟁이 결정적인 문제로 작용했다. 이런 점에서 국가총력으로서 통일촌의 존속 위기는 정부의 책임이 일차적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차제에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통일촌의 토지분쟁 사례는 통일 후 북한토지의 소유권 개편 방향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유곡리에서와 같이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기존 권리가 위협받는다면 그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정부는 작금의 통일촌 사례를 통일촌 자체의 지속가능성 차원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 통일정책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 주1) DMZ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 2km에 이르는 군사 완충지대이다. 민간인통제선은 DMZ 남쪽 5-10km에 걸쳐있으며 군사작전과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계이다. 민간인통제구역은 민간인통제선과 DMZ 사이의 지역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포괄해 'DMZ 지역'으로 통칭한다.
- 주2) 물론 지금까지 DMZ 지역 내 민간인 마을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론적 논의를 생략한 채 현재의 상황 혹은 역사적인 현상을 서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김재한, 2011; 박영철·김영봉, 1997; 경기문화재단, 2013 등 참조).
- 주3) 조사는 주민들의 가족 및 거주, (경제)활동 및 통행, 일상생활, 마을공동체, 안보 및 통일 등의 항목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와 인터뷰지를 통해 진행되었다. 마을의 이장과 청년회장, 부녀회장, 전(前) 철원군의회 의원, 입주 2세대 주민 등 주요인사들을 모두 조사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집단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은 70세 이상(32명, 65.3%), 거주 기간은 40년 이상(41명, 83.7%), 동거가족은 부부(35명, 71.4%), 성별은 여성(30명, 61.2%), 직업은 농업(42명, 85.7%)을 키워드로 꼽을 수 있다. 인구구성에서 1973년 입주 1세대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는 사례가 14.2%(7명)에 불과해 원활한 주민 재생산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대상자 인적사항

구분	인적사항
연령대	50대 1명(2%), 60대 15명(30.6%), 70세 이상 32명(65.3%), 결측 1명(2%)
성별	남성 19명(38.8%), 여성 30명(61.2%)
직업	농업 42명(85.7%), 전업주부 4명(8.2%), 기타 3명(6.1%)
동거가족 ¹	'부부' 35명(71.4%), '자녀' 7명(14.2%), '손주' 2명(4.0%), '없음' 7명(14.3%)
유곡리 거주기간	'0~10년' 2명(4.1%), '11~20년' 0명, '21~30년' 3명(6.1%), '31~40년' 3명(6.1%), '40년 이상' 41명(83.7%)

- 주: 1 중복응답 문항
- 주4) 베트남 사례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제주 4.3항쟁 당시 전락촌이 만들어진 적이 있다(김은희, 2006 참조).
- 주5) 현지 설문조사에서 주민 대부분은 정부의 지원책 때문에 유곡리 입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설문 응답자 49명 중 35명(71.4%)이 유곡리 거주를 정부의 경작권 보장과 주택 제공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 주6) 세대주가 장손일 경우 입주를 불허한 이유는 당시 장손이 귀하게 여겨지던 시대적 정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민 N은 입주 당시의 엄격한 선발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안 되었고, 자녀들 셋에 부부 둘로 다섯 식구가 넘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를 떼 오는 경우도 있고, 농사를 못 지어도 3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못 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 주7) "대북 선전용 마을이라 집들이 똑같이 지어져서 멀리서 봐도 깨끗했다. 또한 과거에는 지금과 달리 (비닐)하우스도 없었고 가장 위쪽에 학교가 위치하는 등 선전 마을의 면모가 뚜렷했다"(주민 O의 증언)
- 주8) "입주 당시 인근 마을인 와수리에는 초가집이 많았어요. 초가집이 80%나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유곡리는 벽체도 두껍게 만들고 지붕도 슬레이트로 했던 말이죠. 그때는 다른 데는 슬레이트가 없었지...<중략>... 그리고 대지가 200평에 건물 두 채로 만들어 주는 데가 어디 있냐구요. 그때는 여기가 아주 별장 같았던 말이예요."(주민 J의 증언)
- 주9) 주민 J는 군사훈련 상황과 긴장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80년대, 90년대에는 서울 사람들이 여기서 (잠을) 자기 못했죠. 대남방송하니까 무서워서...<중략>... '비상'하면 칼빈총을 들고 진지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1호부터 4호까지 제1 방공호, 5호부터 몇 호까지는 제2방공호. 그런 식으로 탄약고에서 탄약을 배치 받아 올라가는 거죠"
- 주10) 2002년 유곡리 입구에 세워진 통일촌 기념비 비문은 다음과 같다: "...<전략>... 6.25전쟁으로 황폐화되어 있던 땅을 1972년 지리 하나하나를 찾아 제거하고 삼과 호미로 농경지를 새로 만들어 나가면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오다가 1973년 민통선 북방 통일

- 촌 건립계획에 따라 60세대의 주민들이 입주 정착하였음. 가구당 농경지 6,300여평을 경작하면서 유곡리의 기반이 형성되기까지 입주주민들의 피눈물과 땀이 배어 있는 정신을 영원히 후손들에게 계승하고 마을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기에 글을 새겨두는 바입니다.”
- 주11) 수확량에 관한 정보는 김영규(2013:364) 참조. 주민 P의 증언을 통해 당시 유곡리의 영농성과와 낙관적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초기에는 논이고 밭이고 다니면서 콩을 심었어요. 그 때는 농지가 정리가 안 됐으니까 공동으로 10집이 1개조로 해서 총 6개조를 짚고, 조별로 모를 심고 가을에 추수 하고. 그러니까 그때 38가마가 나오더라고요. 하하하. 2,400평을 심었는데”
- 주12) “그래도 장교출신과 그 부인들은 어느 정도 학력을 갖췄는데, 우리 나이에 고등학교까지 나온 사람도 드물지. 와서 보니까 여성 가운데 고졸출신은 나뉘어 없고, 잘해야 중졸 아니면 초등학교 출신이라 한글도 안 되는 사람이 많고,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 <중략>... 예를 들어 나는 좋은 뜻으로 “이게 방부제고 이게 방습제입니다” 얘기를 하면 “배운 척 한다, 아는 척한다” 이렇게 말 하니까” (주민 B의 증언)
- 주13) “(입주 초기에는) 타지출신 주민이 많았죠. 두레라는 거 있죠? 다섯 가구씩 해서 서로 일을 도와주었어요. 두레를 만들어서 서로 도와주어면서 했죠. 여기가 두레가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라서 서로 더 잘 되려고 경쟁을 많이 했어요. 도와주면서도 경쟁을 한다고 볼 수 있죠.”(주민 O의 증언)
- 주14) 강원도 양구군 접경지역의 토지분쟁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토지 소유권자의 편을 들어 주었다. 첫째, 군 작전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배제할 수 없으며, 둘째 한국동란에 의한 점유권 이탈은 농지개혁법 상 불경농지(不耕農地)의 개념에 속하지 아니하며, 셋째 민통선 지역의 유휴지를 경작자에게 분배한 것은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소유권 자체를 부인하는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김인영·김재한, 1999:407-408).
- 주15) P주민은 입주 당시 내무부장관이 “당신네들은 여기서 살다가 논두렁 발두렁 비고 죽으시오”라고 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러면 그건 내 땅이잖아. 내 땅이야”라고 항변했다.
- 주16) 토지분쟁 당시 유곡리의 분위기는 살벌했고 토지분쟁 때문에 피해를 본 어떤 주민들은 토지 소유자에게 “칼을 들고 덤벼든”(주민 E의 증언) 일이 생길 정도였다. 주민들이 직접 밭 비고 나서서 국회를 향의 방문하는 등의 행동도 시도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 주17) “그때(입주 초기) 당시는 품앗이를 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의리가 엄청 좋았다고, ...<중략>... 그런데 뒤늦게 땅 임자들이 와 가지고 땅을 뺏고,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 결과 어떤 사람은 (가진 땅이) 5천 평, 어떤 사람은 7천 평 이렇게 되니까 빈곤 차이가 나서 마을 분위기가 살벌해 지는 거지”(주민 J의 증언)
- 주18) 마을에 대한 소속감이 얼마나 강한지 묻는 설문조사에 주민들은 “매우 강하다”(12명, 24.5%), “약간 강하다”(4명, 8.2%), “보통이다”(13명, 26.5%), “별로 강하지 않다”(16명, 32.7%), “전혀 강하지 않다”(4명, 8.2%)로 응답했다. “별로 강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보통이다”, “매우 강하다”라는 응답도 적지 않다. 주민들의 소속감은 초기에 비해 약화되어 현재는 ‘보통’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주19) 설문조사 결과 19명(38.8%)이 주민들은 마을의 가장 큰 단점으로서 공공시설 및 서비스 부재를 꼽았다.
- 주20) 현지답사 중 젊은이들을 거의 발견할 수 없었으며, 설문 대상자 중에서도 40대 이하 주민이 전혀 없고 면접 대상자 중 대부분 주민들(총 15명 중 13명)의 자녀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 주21) 현재 주1회 이동 보건소가 방문해 간단한 진료 및 치료를 진행 중이지만, 전문적인 진료 및 치료를 위해 주민들이 외부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마을의 유일한 어린이용 시설인 놀이터는 현재 황량하게 방치된 상태이다.
- 주22) 마을이 고령화되면서 공동체가 많이 약해졌지만 아직 공동체의 단합력은 일부 견재하고 있다. 또한 이웃에 대한 신뢰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설문조사 결과 ‘매우 강하다’(44.9%), ‘강하다’(10.2%), ‘보통이다’(24.5%), ‘별로 강하지 않다’(22.4%), ‘전혀 강하지 않다’(6.1%)로 신뢰가 높다는 응답이 55.1%를 차지한다. 마을 주민들은 출타시 문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다. 모든 피면접자가 대부분의 경우 문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 이유는 주민들 간의 친밀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출입이 제한되고 보안이 철저한 통일촌의 기본 특징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주민 G, H, I의 증언).
- 주23) 과거에 비해 검문 및 출입절차가 간소화된 했지만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의 배분과 동선의 이용은 여전히 크게 제약되고 있다. 현재 적지 않은 주민들(36.7%)이 마을 밖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검문에 따른 불편함(16.3%), 대중교통 수단의 부족(12.2%), 개인교통 수단의 부재(10.2%) 등이다. 주민들은 인근 ‘읍내’(김화읍 와수리)를 자주 방문하는데 반드시 먼 거리로 우회해 검문소를 거쳐 가야만 한다. 또한 긴급사태 발생 시 구급차 혹은 소방차가 신속히 마을로 들어오지 못한 사례도 있어 통행 문제가 간소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주민 A, E, M, N의 증언).
- 주24) 과거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택한 토지 소유 및 이용의 개편방안과 이것이 농민들의 자립기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최상철·이영성, 1998 참고
- 주25) ‘통일맞이 대성동 첫마을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d mz.go.kr>); 황은순, 2015.7.22. “DMZ 내 대성동 마을 30년 만에 리모델링”, 조선뉴스프레스 기사 참조

인용문헌

References

1. 경기문화재단, 2013. 「통일촌 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 수원.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2013. *Tongil-chon People: The Story of Their Life*, Suwon.
2. 김영규, 2013. 「철원군 지방행정 60년사」, 철원: 철원군청.
Kim, Y. K., 2013. *The 60 Years' History of Cheorwon-Gun Local Administration*, Cheorwon: Cheorwon County Office.
3. 김은희, 2006. “제주 4·3시기 '전략촌'의 형성과 주민생활”, 「역사민속학」, 23: 181-210.
Kim, E. H., 2006. “The formation of the Strategic village during Jeju 4·3 and the life of the villagers”,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forklife*, 23: 181-210.
4. 김창환·이태희, 2013. “GIS를 활용한 민북마을의 분포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1):121-140.
Kim and Lee, 2013.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Spatial Distribution of Villages in Civilian Control Zone by using GIS”, *Journal of Photo Geography*, 23(1):121-140.
5. 김학준, 1999. “DMZ 평화학의 정치적 구상”, 김인영·김재한 편. 「DMZ-발전적 이용과 해제」, 서울: 도서출판 소화.
Kim, H. J., 1999. “The Political Conception of DMZ peace studies”, edited by Kim, I. Y and Kim, J. H., *Developmental Use and Read of DMZ*, Seoul: Sohwa Publishing Co.
6. 김화읍, 2009. 유곡리 마을연보 (바인더 자료). Gimhwa-Up, 2009. *The Annual Report of Yugok-Ri* (Binder Material).
7. 녹색연합, 2008. 「DMZ 155마일을 걷다」, 서울: 도서출판 작은것이아름답다.
Green Korea Organization, 2008. *Walking along the DMZ 155 miles*, Seoul: JAGA.
8. 박영철·김영봉, 1997. “한국의 접경지역 관리방안(하)”, 「국토」, 183: 61-73.
Park, Y. C and Kim, Y. B., 1997. “Korea's Management Policy on Boarder Region(Vol. 3)”, *Planning and policy*, 183: 61-73.
9. 스카치폴, 테다., 1991. 「역사 사회학의 방법과 전망」, 박영신 역, 서울: 민영사.
Skocpol, Theda., 1991. *Vision and method in historical sociology*, Translated by Park, Y. S., Seoul: Ilsinsa.
10. 스콧, 제임스, C., 2010.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전상인 역, 서울: 에코리브르.
Scott, James. C., 2010. *Seeing Like a State*, Translated by Jun, S. I., Seoul: Eco-Livres.
11. 전상인, 1997. “지방화 시대의 분단과 통일: 강원도의 시각”, 「통일연구논총」, 6(2):137-159.
Jun, S. I., 1997. “Localization and Unification: Kangwon-do's Perspective”,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 6(2): 137-159.
12. 진종인, 2006.10.17. “민북마을 사람들④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강원도민일보.
Jin, J. I., 2006, November 17. “Minbook' Viillage's People④: Yugok-Ri, Geunbook-Myun Cheorwon-Gun”, *Gangwondominilbo*.
13. 철원군, 1976-2015. 「철원군 통계연보」. 철원군.
Cheorwon County Office, 1976-2015. *Statistical Year Book*, Cheorwon.
14. 철원군지 증보편찬위원회, 1992. 「철원군지(上)」, 철원군.
Committee for Republishing the Chronicle of Cheorwon-Gun, 1992. *The Chronicle of Chearwon-Gun vol.1*, Cheorwon.
15. 최상철·이영성, 1998.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의 토지소유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14(2): 1-33.
Choe, S. C. and Lee, Y. S., 1998. “A Study on Land Ownership and Use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Journal of KRSA*, 14(2): 1-33.
16. Yann Arthus-Bertrand's Web site, Accessed November 2, 2015.

<http://yannarthusbertrand2.org>

Date Received	2017-02-08
Reviewed(1 st)	2017-03-10
Date Revised	2017-06-13
Reviewed(2 nd)	2017-06-24
Date Accepted	2017-06-24
Final Received	2017-07-05